

# 5·18 왜곡·허위사실 유포맨 최대 5년 징역형

### 5·18 역사왜곡 처벌법 국회 통과 '공정경제 3법' '일하는국회법'도 야,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토론 신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5·18 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공정경제 3법'과 '일하는국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정쟁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설촌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다. 진상규명 관련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5월 관련법 중에서는 이날 이윤빈(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정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

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중점 추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또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지연 작전에 돌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수처장 추천 5명 찬성 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9일 "사퇴와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강행 의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4차례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이견으로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의 후보자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을 위해선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1표 모자란 5표를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결 정족수 5표가 재적위원 3분의 2로 낮아져 5표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은 정족수 규정을 기존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당 측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단은 '빠른 출발'에 무게가 실린다. 추천위가 기존 후보군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고 후보군의 풀도 크지 않아 굳이 새 인물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기존에 투표한 결과를 두고 의결만 하면 추천 절차는 금방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 '판사 사찰' 핵심 쟁점

###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 결론 당일 나오지 않을 수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검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여전히 당장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남 대검 검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

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히 2개 사건이 각각 윤 총장과 대검 검찰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상반된 성격이 있는 만큼 사건 처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2개 사건이 동전의 양면 같은, 쌍방 고소 비슷하게 서로 반대되는 사건이다.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의 검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공인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검찰부에 수사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징계 청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당일 무더기 기피 신청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 검찰관실이 검찰 과정에서 한 대인 조사기록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찰 과정에서 대검 일부 간부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전남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신청 증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징계위에서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징계위에서 결론이 당일 나오지 못하거나 추가 심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 전남도선관위, 총선 음식물 제공 신고 유권자에 포상금 360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유권자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B씨가 식사자리를 마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 B씨로부터 총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부터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은 해당 식사자리를 마련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 여의도 브리핑

### 김희재, 유엔기후협약 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남중권 사·군민의 열원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과 경남여야 국회의원이 조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5개 대륙 순환 원칙에 따라 2023년 제28차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이개호, 박대출, 서삼석, 김태호, 신정훈, 김승남, 하영제,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원익, 강민국 의원이 동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